

## 농촌지도기관 간 연계 협력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Better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Agricultural Extension Agencies

윤의영\*

Eui Young Yoon

#### Abstract

Localization of extension services in 1997 has weakened the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district extension agencies (Provincial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and City & County Technology Centers). Since agriculture needs a national or regional dimension approach in many senses, it is important for agricultural prosperity to maintain and even further strengthen the practice of cooperation between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s and extension agenc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the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agricultural extension agencies. Existing works were reviewed to see a general picture of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localization of extension services. In order to gain insight into policy measures, questionnaire surveys to extension staffs in districts (8 of 9 Provincial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and 160 of City & County Technology Centers) were conducted. Survey respondents were mainly asked about policy measures which would contribute to strengthen the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extension service agencies.

\* 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e-mail: euiyoung@uhs.ac.kr

Three policy measures derived from the study are: to expand the professional and technological education at the central level; to establish the central-local partnership; and to strengthen the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city & county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s.

주요어(Key words): 지방화(Localization), 농촌지도사업(Extension Services), 연계 협력(Linkage and Cooperation)

## 1. 서 론

우리나라 농촌지도사업의 역사에 있어서 1997년의 지도사업 지방화는 중요한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연구·지도직 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이들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농촌진흥기관(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재정권과 감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단체 소속기관의 조직관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농촌진흥사업 측면에서 보면 적잖은 문제점을 노정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지방화 이후 중앙과 지방 간 연계 협력이 약화되고, 시군 농촌기술센터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지도사업의 정체성과 지도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 점,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축소, 지자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인사교류 및 전문기술의 공유가 단절된 점 등을 들 수 있다(농촌진흥청, 2005). 이러한 문제점은 지도사업의 지방화 전후 시점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누누이 지적한 사안이었으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도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시하여 다양한 지방 농촌지도체계 개편 안이 주장·논의 되는 등 다각도의 접근법이 제시 되어 왔다(조영철·송용섭, 1996; 김성수, 2000; 김성수 1996;

김성수·최창욱·최영창, 1997; 양승춘·최영찬, 1995; 한국행정연구원, 2005;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2005; 서울대행정대학원, 2006).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도사업의 지방화 이후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 중에서 농촌진흥기관 간 연계 협력 차원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보기로 하겠다. 이 문제는 크게 두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이다. 지방화 이후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관계를 보면, 농촌진흥사업 운용 측면에서만 농촌진흥청과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연계될 뿐 실질적으로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가 많다는 것이다(농촌진흥청, 2005).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중앙-지방농촌진흥기관-농업현장을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시험연구 기관의 연구결과를 현장에서 실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전파·지도하고, 영농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찾아내 새기술 개발에 환류 시켜주는, 다시 말하면 중앙 및 지방농촌진흥기관과 농업현장의 사이에서 '기술개발과 현장 실용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은 중앙과 지방간에 유기적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지방화 이후 그러한 협력관계가 퇴색하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도사업 지방화가 초래한 또 하나의 문제는 지방간 교류 단절, 즉 농업기술센터 간 협력과 정보와 기술 및 인력교류가 거의 단절상태라는 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벽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상호간 인사와 전문인력 활용, 사업추진 사례 교환 등 정보교류가 거의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결과는 농촌지도사업의 지방화가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색의 이점을 극대화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는 지적도 많다.

지방자치 시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농촌지도사업을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기능적으로도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농업과

농촌문제의 특성상 전국적 통일성과 광역적 협력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방 지방농촌진흥기관 간 관계가 지금처럼 폐쇄적으로 지속된다면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 농업인에 대한 지도서비스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지방화 이후 나타난 우리나라 농촌진흥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지도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촌진흥기관 간(중앙-지방간 및 지방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중앙과 지방 농촌진흥기관간 의사소통과 연계 협력 체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중앙-지방간 연계 협력 수준의 파악과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해온 연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하며, 끝으로 연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연구 방법은 기존의 관련 문헌자료와 함께 특히 중앙-지방간 연계 협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의 협조 하에 제주도를 제외한 8개 도 농업기술원과 160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 2. 지방화와 농촌진흥사업의 문제점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관련 연구 및 기술지도보급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유일한 정부기관이며, 농촌진흥연구 및 지도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적·광역적 기능이다. 그러나 1997년 연구·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조직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귀속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 중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연구 및 지도사업과 관련한 중앙과 지방간 연계성 약화를 들 수 있다.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인사·재정·감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환되면서 지방농촌기관(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공무원이 본연의 임무인 시험연구 결과의 현장 실용화를 위한 기술보급 및 영농문제점 파악보다는 소속 자치단체의 농산행정인력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약화는 시군 지도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이는 다시 지도서비스 수준 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선진국의 농촌지도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기능으로 분류된다. 비록 국가 별로 다양한 지도체계가 있지만(예컨대, 미국과 스위스는 대학의 연구·교육기능이 주도하는 대학 외연교육형, 일본은 정부조직형, 덴마크는 농민조직이 주도하는 형태), 시행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농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하에 지도사업이 이루어진다(농촌진흥청, 2005).

둘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농업기술센터를 미설치하여 농촌지도사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2005년 12월 현재 부천, 오산, 안양, 하남, 동두천, 광명, 구리, 군포, 과천, 전주, 목포, 울주 등 12개 시군이 농업기술센터를 미설치하고 있다.

셋째, 자치단체별 지역특화작목 조정에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도직 지방직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도사업 조정기능이 약화되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새기술 보급보다는 자치단체별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지도사업에 전념하게 됨으로써 자치단체 간에 필요 이상의 경쟁을 유발하고 지역간 조정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넷째, 농촌지도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어렵다. 농촌지도인력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인력 충원 및 교류 부족으로 지역농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와 지역 농업인의 기술지도 욕구수준에 차이가 발생하

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서비스가 약화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지도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농업인에 대한 새기술 보급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지도인력의 전문성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도직의 지방직 전환 이후 지도인력의 감축, 읍면 농업인상담소 폐지, 지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감축 등으로 지도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자치단체별로 전문지도사를 폐쇄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시군 간 기술정보 교류가 단절되는 등 농업인에 대한 기술지도 서비스가 오히려 약화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 3. 중앙-지방 간 연계협력

#### 3.1. 지도사업 현황

지도사업의 지방화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초래하였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중앙의 관료적 통제 축소 및 지역의 자율성 증대, 지역 자율성을 바탕으로 특화사업 추진이 용이해진 점 그리고 지방 지도 공무원의 생활안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적잖은 문제점도 수반하였다. 예컨대 지역농업의 균형발전 저해, 지도기관 및 지도사업의 정체성 문제, 전문성 향상에 장애가 되는 점, 지도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따른 지도사업의 생산성 저하, 그리고 중앙-지방 지도기관간 연계협력의 약화 등이 그것이다(서울대 행정대학원, 2006).

지방화 이후 중앙-지방간 연계협력 체제가 무너지면서 많은 문제가 드

러나자 농진청은 중앙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지방농촌진흥기관 발전을 위한 34개 개혁과제 중 6과제가 여기에 포함된다(〈표 1〉 참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관 부서별 추진과제 11과제가 있다.

- 지방 연구·지도사업 현장지원강화 및 공동연구 확대: 4과제
- 첨단 정보기술(IT)이용 지식기술정보 공유 강화: 2과제
- 연구과제별, 작목별 교육·연수 지원 강화: 3과제
- 국가차원의 핵심 전략과제에 대한 홍보 및 협력강화: 2과제

2006년도 농촌지도사업에서도 '중앙과 지방 농촌지도기관의 연계 및 협력 강화'가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바 있다(농촌진흥청, 2006).

### 3.2. 설문: 중앙과 지방간의 연계협력 수준에 관한 지방 지도공무원의 평가

중앙과 지방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지방농촌진흥공무원들을 상대로 현재 추진 중인 중앙-지방 연계 협력 강화방안에 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중앙(농촌진흥청 본청)에서는 정책사업의 내용과 방법들을 결정하고 추진하지만 그 성과는 지방(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이 어떻게 반응하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 문제에 대한 지방의 지도공무원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문제의 원인 파악과 향후의 발전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설문 대상은 도원의 경우 전체 담당 및 과장, 시군센터의 경우는 과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개인별 의견조사가 아닌 계 및 과의 의견을 취합하여 설문응답하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한 개인적 판단에 따른 편차를 줄이고 부서 및 기관차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564부(도원 244, 센터 320부)를 배포하여 229부(도원 89, 센터

140부. 유효응답 회수율 40.6%)를 회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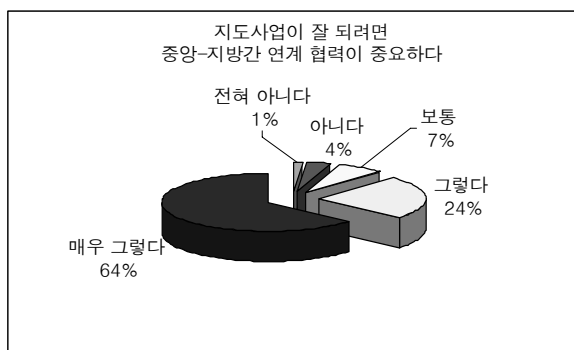
〈표 1〉 농진청이 추진 중인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연계협력 강화 방안

과 제 명	내 용	주관 기관/부서
① '전국농촌진흥인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	○중앙: 연말 종합보고회 행사와 연계, 지방기관 유공자포상 확대 ○도단위: 체육행사, 성과보고회, 전시·홍보 행사 등 화합행사 확대	각 도원, 발전기획단
② 중앙과 지방간 교환근무제 확대	○교환근무 대상이 연간20명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가 요청됨 ○교환근무 지원예산 확보, 교류희망자 인사상 우대 방안 모색 ○교환근무 내실화를 위한 지침마련 (연구개발국)	정책홍보관실, 연구개발국
③ 농촌진흥공무원 전문가 Pool제 활성화	○전문가 Pool제를 기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 미흡: 40품목 370명 ○중앙단위 기술전문가 Pool제 신규구축: 작목별 분류 300명 정도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및 지자체간 협약	농촌지원국
④ 지방농촌진흥기관광역화(국가직화) 추진	○외부전문가 컨설팅(용역연구)에 의한 세부추진방안 마련 ○시안마련 후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방순회 공청회 등 개최 ○개선안 및 관련법령 개정안 확정 추진(07 이후) 체결 권유	발전기획단
⑤ 지방농촌진흥사업 시상제 도입	○지방농촌진흥공무원에 대한 정부포상 확대로 사기진작(농촌지원국 협력) ○정기포상 실리확보를 위한 관련부처와 협의 및 확대요구(행자부)	정책홍보관리실
⑥ 중앙·도·시군 공동 연구 확충	○'06 시험연구사업지침 개정을 통한 연구협력체제구축(연구개발국) ○공동연구에 지도직 참여, 전문지도 연구회 연구직 참여 상호정보 교류 ○'07도와 시군 간, 중앙과 지방간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수요파악: '06 9월	연구개발국, 각 도원

자료: 농촌진흥청(2005. 12. 20) 내부자료. 지방농촌진흥기관 개혁과제(안)의 내용을 재제리 함.



기본적인 질문은 “지방화 시대에도 중앙과 지방간 연계협력이 농촌지도사업을 위해 중요한가?”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이 88%(매우 그렇다 64%, 그렇다 24%)로 나타나 지방의 지도직 공무원들은 지도사업이 지방화 되어도 중앙과 지방간 연계협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그림 1〉 지방화 시대에도 중앙-지방 간 연계협력 중요하다?

〈표 2〉 중앙(청)과 지방(도원, 시군센터) 간의 연계·협력 수준에 대한 평가

시 점	구 분	연계·협력 수준 평가 평균점수		
		시군응답자	도원 응답자	전 체
지방화이전	청-도원(센터)간 관계*	3.89	4.15	3.99
	도원-센터 간 관계	4.23	4.34	4.27
현 재	청-도원(센터)간 관계	2.85	2.86	2.85
	도원-센터 간 관계*	3.22	2.91	3.10
향후 전망	청-도원(센터)간 관계	2.70	2.40	2.59
	도원-센터 간 관계*	3.05	2.39	2.80

주: \*는 시군 응답자와 도원 응답자 사이의 평가점수에 대한 평균비교(t 검증) 결과 유의도 0.05 미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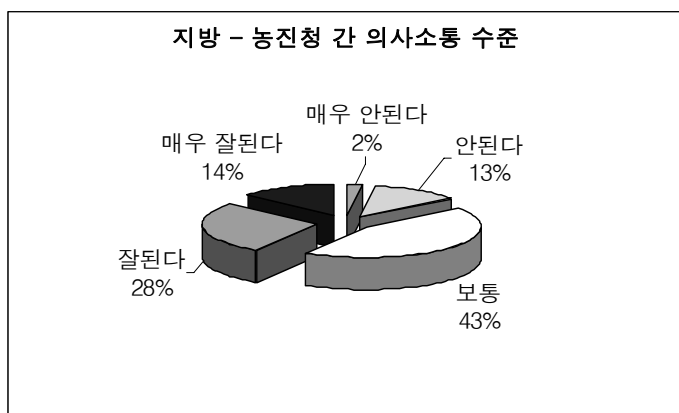
다음으로 지방화 이전과 현재 그리고 향후에 중앙(청)과 지방(도원, 시군센터)간의 연계·협력 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공무원들의 신분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농진청 본청과 도 농업기술원 그리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인적, 물적 그리고 정보교류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먼저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농진청 본청과 도 농업기술원 혹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사이의 연계·협력수준에 대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응답자들은 지방화 이전에 3.89(5점 만점 기준)이라고 평가한 반면에 현재는 2.85 그리고 향후에는 2.70으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도 농업기술원의 응답자들도 본청과의 관계에 대해 거의 유사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사이의 연계·협력 수준에 대해서도 지방화이전에 각각 4.23(시군 농업기술센터 응답자)과 4.34(도 농업기술원 응답자)이라고 평가한 데 비해 현재는 각각 3.22와 2.91로 평가하였고 향후에는 더욱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응답자에 비해 도 농업기술원의 응답자들은 지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두 기관 사이의 연계·협력 정도를 더 낮게 평가하는 점이 흥미롭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자치단체의 영향력이 커졌다. 실제로 자치단체장의 요구로 기술센터가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더 치중하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 통제력이 크게 약화된 도 농업기술원에 입장에서 보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협력 수준의 약화 현상을 더 절감할 것이다.

중앙 및 지방 간 연계협력 약화는 의사소통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방에서 볼 때 중앙(농진청)과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42%(매우

잘된다 14%, 잘된다 28%), 보통 또는 잘 안된다는 응답이 각각 43%와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림 2〉 지방화 이후 지방-농진청 간 의사소통 수준

그러면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표 3〉참조) 지방의 지도직 공무원들은 청-도원-센터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도원-센터 지도직 공무원들이 직면한 인사문제(직급체계, 인사적체)를 해결할 수 없는 이들 기관간의 조직특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관들 사이의 공식적 의사소통 채널의 단절 혹은 약화와 그리고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정책루트로 인한 혼선을 들고 있다.<sup>1)</sup>

1)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루트로 인한 혼선에는 농림부가 주관하는 농촌관련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지만, 지방 단위에서 이 사업의 수행은 반드시 도 기술원, 시군 기술센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도 깔려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청-도원-센터 사이의 의사소통 저해요소에 대한 평가

항 목	시군 응답자	도원 응답자	전 체
지방화 이후 공식적 의사소통 채널의 단절 혹은 약화	3.61	3.79	3.68
중앙의 관료적 의식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	2.87	3.01	2.92
청에서 지방농촌진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	3.17	3.33	3.23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루트로 인한 혼선 때문	3.45	3.49	3.47
지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줄어들었기 때문	3.41	3.20	3.33
청에서 지방지도직 공무원의 인사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	3.98	4.22	4.07

주: 값이 클수록 저해 요소라고 동의하는 정도가 큼을 의미함.

지방 지도직 공무원들은 직렬 면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도직이지만 신분은 과거와 달리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 귀속되어 승진, 인사교류를 통해 상위 기관으로 이동이 어렵고 지도직 신분으로 자치단체 내 다른 부서로의 이동도 거의 불가능해졌다. 즉 본청, 도원, 센터는 농업기술개발과 보급, 생활지도라는 동일한 기능을 갖고 또 외형적으로는 중앙-광역-시군에 이르는 위계적 구조를 가지지만, 인사조직면에서 서로 단절된 독립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청-도원-센터 사이의 연계·협력은 사실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업비 배정이라는 유인 수단을 통해 연계·협력을 끌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가의 농림사업비에서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사업비 비중은 농림부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이끌어내는 쉽지 않다. 결국 본청-도원-센터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인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인 배경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상의 설문 결과를 보면 중앙과 지방간 의사소통이 미흡하고 연계협력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

예상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농촌진흥청은 중앙-지방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방안들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지방의 지도공무원들은 중앙과 지방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도사업비의 국고 지원확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지도사업 역량 제고 지원, 해외 연수기회와 전문교육 기회 그리고 장기 연수 및 교육 강화 등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외에 청-도원-센터간 지식·정보 네트워킹과 공동연구 등도 중앙-지방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표 4).

〈표 4〉 중앙-지방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 (5점 만점)

방 안	시군 응답자	도원 응답자	전 체
전국 규모의 행사개최(예: 농촌진흥인의 날)	2.97	2.68	2.86
중앙-지방의 교환근무제	2.98	3.47	3.16
기술전문가 Pool제 운영	3.50	3.43	3.47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광역화(국가직화)	3.44	4.31	3.76
지방농촌진흥공무원에 대한 정부 포상 확대	3.70	3.84	3.75
청-도원-시군센터의 공동연구	3.91	3.86	3.89
지방의 연구·지도사업 역량 제고 지원 등	4.19	4.12	4.17
지식, 정보 네트워킹 강화	4.12	4.04	4.09
중앙 단위 전문교육 지원확대와 내실화	3.97	3.82	3.92
해외 선진농업 연수기회 확충	4.09	4.15	4.11
장기 연수/교육 강화	3.75	4.06	3.86
농가 현장 기술지원 강화	3.44	3.70	3.53
지도사업비의 국고 지원 확대	4.45	4.22	4.37
합리적 평가제도와 인센티브제 도입	3.99	4.10	4.03

한편 중앙-지방의 교환근무제라든지, 기술전문가 pool제, 지방기관의 광역화, 지방의 지도직에 대한 정부포상확대 등 인사·조직상의 개편 방안들은 중앙-지방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덜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청-도원-센터간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사, 조직상의 문제가 가장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 것과 다소 모순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모순된 평가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의식적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지도직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 불거진 인사, 조직상의 문제는 분명히 청-도원-센터간 의사소통을 단절 혹은 약화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이 문제의 해소가 바로 중앙-지방간 연계·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지방 근무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공동연구, 정보교류 등 구체적 프로그램들이 연계·협력을 강화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된다. 요컨대, 인사, 조직 수단은 연계·협력 강화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며 연계·협력을 담보하는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인식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표 5>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표 5>는 '청-도원-센터간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어떤 사항이 생각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주관식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유력한 방법은 정보와 지식교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이를 유력한 의사소통수단인 것으로 꼽고 있다. 이외에 중앙과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세미나, 연찬회 개최도 세 기관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는 방안인 것으로 꼽고 있다. 이 두 방법은 지금이라도 당장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며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청-도원-센터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 (다중응답)

항 목	빈 도	%
정보 / 지식교류, 기술교류, 정보 등	112	27.1
중앙단위 교육, 세미나, 연찬회 등	64	15.5
공동연구, 시범사업 등	52	12.6
인사교류, 인사 등	41	9.9
업무연락, 업무협조, 공동업무 등	50	12.1
출장 등	29	7.0
친근감, 유대관계 등	27	6.5
예산지원, 사업비 지원, 국비지원 등	16	3.9
기타	22	5.3
합	413	100.0%

주: 시군농업기술센터 응답자(139명)별로 최대 3개의 주관식 복수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그러나 인사, 조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교류(29.5%)라든지, 업무연락(36%)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결국 〈표 5〉는 청-도원-센터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체제의 구축은 인사, 조직 수단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action program)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세 기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구체적 프로그램 마련이 더 중요하다는 위의 조사결과도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 4. 중앙-지방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문헌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본 결과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 상호간에 연계 협력이 미흡한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방화로 인해 중앙-지방간 그리고 지방 상호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약화되었다. 둘째, 연계 협력을 유도하는 적절한 동기 및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셋째, 지방에서 부담감이 적고, 자치단체 간 마찰이 없는 실행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지방화의 제도적 틀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중앙-지방간 연계 뿐 아니라 지방 상호간에 마찰 없이 협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 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중앙-지방간 및 지방 상호간에 연계 협력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 한다: (1) 중앙단위 교육 차원의 방안; (2) 중앙-지방간 파트너십 구축; (3) 시군 농업기술센터 간 연계 협력의 강화

#### 4.1. 중앙단위 교육 차원의 방안

중앙단위 교육은 지도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가장 큰 목적이다. 그러나 지도사업의 지방화로 중앙과 지방 농촌진흥기관 간 연계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중앙단위 교육은 중앙-지방간 연결고리 역할자로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도원 및 시군센터 농촌진흥공무원 설문결과 중앙-지방 연계 협력 및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이 해야 할 일로 '지방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의 제공'으로 나타났다. 지방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중앙단위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면 중앙-지방간 연계성이 증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중앙단위 교육은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2005년도 교육 수료자들에 대한 설문결과, 중앙단위 교육에 대한 농촌진흥공무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현장적용 기술과 기능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농업전



문학교. 『2005년도 교육훈련종합평가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실습, 수확 후 관리, 유통,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 등 기능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또 하나는 장기교육의 확대이다. 한국농업전문학교의 2005년도 전문교육 교과과정은 모두 47개 과정인데 그 중 4주와 5주 장기교육은 5회 뿐이고 대부분 3일에서 1~2주 단기교육 위주로 되어 있다(표 6). 따라서 교육기간 연장을 통해 장기집중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sup>2)</sup>.

〈표 6〉 2005년도 한국농업전문학교 전문 교육

구 분	교육기간	2005년도 교육		
		과 정	인 원	
합 계	3일~5주	47	2,462	
공통전문교육	1주~2주	3	183	
선택전문 교육	계	3일~5주	44	1,559
	단기교육	3일~4주	38	1,489
	장기교육	5주	3	70
	특별교육	1주	3	720

자료: 한국농업전문학교. 『2005년도 교육훈련종합평가서』.

#### 4.2. 중앙-지방간 파트너십 구축: 정부간관계(IGR) 시각에서의 접근

정부간관계(IGR: Intergovernmental Relations)란 분권체제 하에서 정부 간에 나타나는 수직적(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수평적(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상호작용을 말한다(Wolman and Goldsmith, 1992:

2) 지방농촌진흥공무원들은 장기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기를 희망하지만 지도 인력 과부족으로 장기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현실적 문제와 자치단체장의 지도사업에 대한 인식여하에 따라 교육훈련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직무병행교육(On the Job Training)이며,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는 2008년부터 8개월 과정의 OJT 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승중, 2003). 그 상호작용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초래되는데 그 이유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선거에 의해 구성되고, 정치적 정당성을 보유할 뿐 아니라, 각급 정부(중앙, 광역, 기초)는 조직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 재량권,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한쪽 정부(특히 중앙정부)의 선택을 다른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한다는 보장이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7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주정부에서 정부간관계를 다루는 부서를 두고, 지방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는 전문직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조창현, 1998). 우리나라에서도 민선자치 이후 정부간관계 차원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간에 협력이 잘 되지 않는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정부간관계의 특징은 그것이 법적관계라기 보다는 이들의 활동과 접촉 관계를 의미하며, 비공식적, 실질적, 목표지향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각급 정부와 그에 속한 공직자 그리고 지방정치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과 태도가 중요하다. 또한 정부간관계는 기존의 계층적 상하관계가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간관계의 유형은 크게 통제모형과 협력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순은, 2005). 통제모형은 다시 집행기관모형과 대리인모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에서는 지방정부는 재량권이 없이 중앙정부의 집행기능만 담당하는 집권형 정부간관계이다. 후자에서는 지방정부가 일정한 재량권내에서 집행기능을 갖는 형태이다. 두 모형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중앙과 지방간에 명령 복종 관계가 존재한다.

협력모형은 상호의존 모형과 동반자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상호의존 모형은 중앙과 지방 모두 각자의 자원(정치적 독립성, 조직관리권 등)을

보유하고 있고, 상호의존이 필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비해 다소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동반자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협력모형에서는 중앙과 지방간에 비공식적, 작업적 관계가 큰 역할을 담당하는 특징이 있다.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간 관계를 보면 위에서 설명한 정부간관계의 유형 중 상호의존모형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지도사업이 지방화 된 이후 시군센터의 조직관리권을 자치단체장이 행사한다는 점과 정책 및 자원배분 결정권에 있어서 중앙이 우위에 있지만 지도사업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볼 때 상호의존모형에 가깝다.

#### 4.2.1. 정부간관계 하에서의 중앙-지방간 협력: 청-도원-시군센터 간 파트너십 구축

정부간관계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과 권한행사에 변화가 발생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영국의 정부간관계에서 볼 수 있는 중앙-지방 파트너십 회의(Central-Local Partnership Meeting)가 좋은 예이다.<sup>3)</sup> 중앙-지방 파트너십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500여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이 공동작업의 조정과 자문 및 정보를 교환한다. 즉,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입장에서 정책을 설명하는 동시에 지방의 견해를 수렴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연합회 회원정부를 위한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여 중앙과 지방 모두가 win-win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다.

3) 영국의 정부간 관계에서 중앙-지방파트너십 회의의 내용과 성과에 관하여는 김순은 (2005. 6) 참조.

농촌지도사업에 있어서도 영국과 같은 중앙-지방간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지방화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농진청-도원-시군센터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도원장 업무협의회나 도원-시군센터간 각종 모임(평가회, 연찬회, 품목별협의회, 정기교육 등)을 통해 청-도원간 그리고 도원-센터간 연결고리는 어느 정도 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이런 모임이 청-도원-센터로 이어지면서 지방화에 따른 지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앙-지방간 연계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농진청과 시군센터 간의 연결고리는 청-도원 간 관계보다 더 취약한 상태여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의 농촌지도사업이 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연결 축 역할을 하는 곳이 시군센터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중앙-지방 파트너십 회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 중앙-지방 파트너십 회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지방의 지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사항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으로는 ‘지역별 시책사업(또는 특성화 사업) 우선순위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그 방안은 각 시군 센터에서 당해 시군의 지역시책사업이나 특성화 사업을 선정한 후 도 농업기술원과 협의하여 도 공통의 시책사업 및 센터(또는 지역)별 특성화 우선사업의 순위를 정한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농진청 차원의 역점사업을 반영한다. 도농업기술원은 연례 ‘중앙-지방 파트너십 회의’(가칭)에 상정 후 협의하여 결정토록 한다. 농진청은 ‘중앙-지방 파트너십 회의’에서 결정된 우선순위 사업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센터의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우수센터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앙-지방 파트너십 회의의 기대효과로는 상하 계층적 관계의 협의회나 모임보다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지방의 참여를 고취할 수 있고, 농진청에서 시군의 지역시책사업 및 특성화 사업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활용하면서 중앙-지방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4.3. 시군 농업기술센터 간 연계 협력의 강화: 시군센터 간 실험장비 공동이용제도

현재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실험실습 장비 및 기기를 각 시군 센터 별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그러나 실험실습 장비나 기기의 종류가 다양하고 상당한 고가의 제품도 있어서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필요한 장비와 기기를 원하는 때에 구입하여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재정자립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센터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의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가 양호한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보니 상당수의 시군 센터가 실험실습 장비 및 기기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시군 센터 간 장비 및 기기 보유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시군 센터 별 장비와 기기 구입의 또 한가지 문제점은 고가의 실험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그 활용도가 낮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시군 센터간 실험실습 장비 및 기기를 공동 이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시군 센터 별 보유 장비와 기기, 그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후 필요한 센터끼리 연결 시켜주어 시군 센터간에 장비와 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22개 시군 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현재 보유 및 앞

으로 구입이 필요한 실험실습 장비와 기기 수요를 파악하고 이 방안의 가능성에 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표 7〉). 연구 결과, 몇가지 장애요인만 극복하면 시군 센터 간에 장비와 기기의 공동이용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실험실습 장비/기기 공동이용 설문 결과(경기도 22개 시군 센터)

	응답	센터 수
장비/기기 공동이용 여부	전혀 공동이용 하지 않음	17
	가끔 공동 이용 함	5
	자주 공동 이용 함	0
향후 공동 이용 의사 여부	예	10
	아니오	10

주: '06. 12. 1~6까지 경기도 각 시군 센터의 실험실습 장비/기기 조사 및 설문을 실시하였음. 22개 센터 중 안산시(센터 건물 신축 중)와 평택시(자료 일부 미비)는 불포함.

조사 대상 시군 기술센터 중 현재 타 시군 센터와 실험실습장비나 기기를 가끔 공동 이용하는 센터는 5개소(고양, 용인, 화성, 안성, 양주) 뿐이고, 나머지는 전혀 공동이용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장비 및 기기를 공동이용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반반씩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가끔씩 공동 이용하고 있는 센터 중 고양시 센터는 앞으로 공동이용 할 의사가 없다고 답하였는데, 공동이용에 반대하는 이유는 주로 장비나 기기를 보유한 센터 측에서 기기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거나 번거로움, 출장 처리 문제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표 8〉은 경기도 내 시군 기술센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장비와 기기를 조사하여 그 중 일부를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매칭 시킨 표이다. 예컨대 수원시 기술센터는 원자흡광분광

광도계(AAS)가 필요하지만 현재 없으므로 이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용인 센터의 기기를 이용하고, 용인시 기술센터는 수원시 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초자기구건조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한 예이다. 시흥과 양주는 고압멸균기와 증류수제조장치를 공동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실험실습 장비/기기 공동이용 매칭 표1

장비/기기가 필요한 센터	필요한 실험 실습장비 (명칭 또는 모델명)	용 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군 센터
수 원	원자흡광분광광도계 (AAS)	토양 양이온 및 중금속 분석	용 인
용 인	초자기구건조기 (대형)	미생물배양관련 초자기구 건조	수 원
시 흥	고압멸균기	멸균	양 주
양 주	증류수제조장치	순수, 초순수 채취	시 흥

주: 위 표는 조사자료 중 일부 예이며, 공동이용 실행 시에는 보다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그러나 〈표 8〉처럼 모든 장비와 기기를 시군 센터끼리 맞교환하여 공동이용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표 9〉와 같은 공동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양평은 고양시 센터의 장비(GC)를 사용하고 화성시는 용인시의 장비(비색계)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시군센터 간 합의 또는 도 농업기술원의 조정을 통하여 실험실습 장비와 기기 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9〉 실험실습 장비/기기 공동이용 매칭 표2

장비/기기가 필요한 센터	필요한 실험 실습장비 (명칭 또는 모델명)	용 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군 센터
양평	GC	농약잔류검사	고양
화성	비색계	친환경농업관리실검정	용인

실험실습 장비 및 기기를 공동 이용하는 또 하나의 방안은 시군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나 기기를 국비 또는 도비로 구입하여 여러 시군 센터가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ICP(용도: 토양·수질 양이온, 중금속 분석)가 필요하지만 현재 보유하지 못한 센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예: 남양주, 시흥, 화성, 용인, 광주, 여주 등) 이런 경우 국비나 도비로 ICP를 구입하여 인접 2-3개 센터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군 센터의 실험실습 활동을 촉진하면서 효율적으로 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시군 센터 간 간접 교류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험실습 장비 공동이용제도의 기대 효과는 첫째, 센터간 교류 증진을 통한 기능적 광역화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실험실습 장비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센터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기능적으로 광역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인력교류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기기 공동이용을 토대로 현재 단절된 시군 센터간 인력교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도 고가의 기기를 공동이용 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효과를 충족시키자면 도 농업기술원과 농진청의 역할도 필요하다. 먼저, 도 기술원의 역할로는 각 센터의 장비와 기기 보유 및 수요 현황을 파악하여 센터간 상호 필요한 장비와 기기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기술센터간 장비와 기기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동이용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농진청의 역할로는 장비와 기기의 공동이용이 활성화 되는 지역에 대해 새 장비 구입비용 지원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울러 기술센터간 장비와 기기 공동이용이 전문인력교류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5. 요약 및 결론

지도사업이 지방화 된 이후 중앙과 지방간 연계 협력이 매우 취약해졌고,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농촌진흥조직 체계 또는 행정기구 개편과 같이 조직의 틀이나 체도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방화의 범주 내에서 제도와 법 개정을 수반하지 않고 중앙-지방간에 그리고 지방 상호간에 큰 갈등을 빚지 않으면서 시행해 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방안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중앙단위 교육훈련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앙단위 교육에서 현장적용 기술·기능교육의 강화와 장기 집중교육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중앙-지방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앙과 지방간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지방화 시대에 맞게 중앙-지방 관계를 정부간관계 관점에서 접근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의 도원-센터간 연찬회 일부를 도원-센터 파트너십 회의로 전환하여 도 공동사업이나 지역별 시책사업(또는 특성화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우선순위결정 및 사업 평가에 도원 역할 강화), 청-도원간 도원장 업무협의회 2~3회를 청-도원 파트너십 회의로 전환하여 도원-센터 파트너십 회의의 내용을 청취·논의하고 중앙차원의 역점사업과 시책을 추진하는 협의체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군 센터간 실험실습 장비와 기기를 공동 이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각 시군 센터 별로 구입하여 운용하는 실험실습 장비와 기기를 여러 센터가 공동 이용하도록 하면 지방화의 틀 내에서도 기능적 광역화와 연계협력을 이룸으로써 자연스럽게 센터간 상호교류의 틀을 마련하고 비

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 농업기술원과 농진청은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센터간 협력이 원활하도록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김성수. (1996). 농촌지도직 공무원 지방직 전환의 문제 및 합리적인 법률 개혁. *한국농촌지도학회지*, 3(1), 165-166.
- 김성수, 최창욱, & 최영창. (1997). 농촌지도직공무원 지방직 전환 첫해의 예비 평가. *한국농촌지도학회지*, 4(2), 415-421.
- 김성수. (2000). 농촌지도직 국가직으로 환원해야.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2), 391.
- 김순은. (2005). 영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정부간 관계의 혁신적 모형-거버넌스 모형의 시도. *지방행정연구*, 19(2), 3-34.
- 농촌진흥청. (2005). *지방농촌진흥기관 개혁 과제*(안). 수원: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2006). *2006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 수원: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2005).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성과 분석과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개발 방향*. 수원: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발전기획단. (2005). *지방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방안 -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개편 중심*. 수원: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발전기획단. (2006). *지방농촌진흥기관발전기획단 업무 자료집(III)*. 수원: 농촌진흥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지방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지방농촌진흥조직 재설계에 관한 연구*.
- 이승중. (2003). *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 서울: 박영사.
- 양승춘, & 최영찬. (1995). 지방직화 이후 새로운 농촌지도사업의 추진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2(2), 163-173.
- 조창현. (1998). *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
- 조영철, & 송용섭. (1997). 농촌지도공무원 지방직 전환 이후 제도개선 과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4(1), 353-358.
- 한국농업전문학교. (2005). *2005년도 교육훈련종합평가서*.
- 한국행정연구원. (2005). *지도직 공무원 계급 및 보수체계 개선방안*.
- Wolman, H., & Goldsmith, M. (1992). *Urban Politics and Policy*. Oxford: Blackwell Publishers.